

# 국가정보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의 경계선적 문제들과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

## Boundary Problem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Making and Executing National Information Policy

김 창 수(Chang-Soo Kim)\*

### 목 차

- |                   |                 |
|-------------------|-----------------|
| 1. 서론             | 3.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 |
| 2. 경계선적 문제들       | 3.1 OECD        |
| 2.1 도서관과 정보의 접근법  | 3.2 UN기구들       |
| 2.2 일반적 및 전문적 접근법 | 3.3 EC          |
| 2.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 3.4 기타 유럽 지역들   |
| 2.4 정보 및 IT정책     | 4. 결론           |
| 2.5 사무정보정책과의 연결   |                 |

### 초 록

국가정보정책은, 변화를 예상하고 그러한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고, 종래의 방법이 더 이상 적합치 않을 때는 폐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면 그것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은 정책 결정 차원에서의 '정신적 活氣'와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 두가지 자질은 다른 국가정책을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 ABSTRACT

National information policies have to be flexible : to anticipate changes and turn them to good advantage, to scrap old approaches as they cease to be relevant and to experiment with new approaches as they cross the horizon. This flexibility implies 'a liveliness of mind' and 'a spirit of enterprise' at the policy-making level, two qualities that do not abound and which must be in demand for other national policies.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8년 12월 10일

##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토지, 노동력, 및 자본과 같은 전통적 개념의 요소에 못지않게 또는 보다 더 중요하게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획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원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한 진지한 정책을 가진 국가는 필요한 정보의 공급과 이용을 보장해주는 보완적 정책이 또한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인식하여 국가정보정책에 해당하는 다양한 방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실행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어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가정보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경계선적 문제들과, 또한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에 관하여 고찰코차 한다. 경계선적 문제들이란 국가 정보정책의 결정과 집행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OECD, UN기구들, EC, 및 기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 경계선적 문제들

국가 정보정책의 결정은 경계선적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문제들은 정보 취급의 복합적 성질 또는 그것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때문에 야기된다. 지금부터는 5개의 중요한 경계선적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 도서관과 정보의 접근법
- 일반적 및 전문적 접근법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 정보 및 IT정책
- 사무 정보정책과의 연결

### 2.1 도서관과 정보의 접근법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많은 정보봉사를 제공해왔으며,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적 역할은 물론이고, 정보와 큰 관계가 있었다. 도서관은 자원의 주요투자를 나타내며, 비록 도서관의 궁극적 미래에 대하여는 많은 추측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보기술(IT)의 공격에서 잘 생존해 왔다. 그것은 정보와 도서관 정책은 함께 가야하며 무관한 길로 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보정책과 도서관정책의 독특한 접근법 사이에 어떤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정책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주로 도서관을 통해서 계속 얻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정보정책은 전자 출판과 문헌전달의 시대에서의 도서관의 현재의 공헌이나 새로운 전망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아서는 안된다.

많은 특유의 문제들이 이 뼈대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상업적 정보봉사에 대한 요금 부과는 불가피하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요금부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공공도서관들과 뭉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주

로 봉사하는 도서관들은 요금부과에 반대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요금부과가 단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이동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서관 지출경비가 가게 건물을 지어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토록 하는데 집중된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 가게의 이용은 비교적 작은 추가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개개인에게, 온라인 탐색 같은 것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큰 대외 비용을 초래하며, 만약 그것이 무료라면 곧 가용 자금이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요금이 탐색 비용을 전부 충당하지는 않는다 해도,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 만약 도서관이 지역 온라인 처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광디스크로 싸게 구입한다면 미래에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디스크와 처리장비는 책, 정기간행물, 편목과 같이 경상비가 될 것이며,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만약 도서관이 이 데이터베이스 탐색에 요금을 부과치 않는다면, 내부 처리 비용만 맞추면 될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경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지역 상·공업 회사들에게 무료 봉사를 여전히 제공할 것이다.

현재 도서관들은 가격정책에서 서로 큰 차이가 나며, 법적 또는 재정적 입력으로 변화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계속 그럴 것이다. 첫째로는 어떤 도서관들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제한을 받는다. 국가 정책 수준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변칙적 관행을 예방하며, 법적 변화가 유익해질 경우를 가려낼 수 있다. 정부, 도서관 당국, 및 전문 협회가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다. 영국 정부는 한 협의서(Office of

Arts and Libraries, 1988)를 통하여 공공도서관들과 그러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그 협의서는 고무적 방식에서 요금(가능한 법적 변화를 포함하여)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외부 기관들의 언급과 제안을 수렴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서관과 정보센터 간의 협력에 관련된다. 자발적이며, 대개는 비공식적인, 협력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존재해왔다(편목, 문헌 공급, 및 질문에 대한 회신등). 그것은 대개 열성적 선구자들이 만든 것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제약을 받아왔다. 협력의 범위와 크기는 크게 확대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 수개 국가의 정부들은 좀더 체계적으로 또 협력단체들의 상급 관리자들과의 확고한 약속으로 협력을 진작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영국에서는 “지역 도서관과 정보계획”이라는 아이디어가 “도서관과 정보봉사 협의회”(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uncil)에 의해 고무되었는데(LISC, 1986), 그 협의회는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하고 있다. 5개년 관리계획은, 공공도서관 당국이 다른 公的 및 私的 부문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들과 협력하였다면 입안되었을 것이다. 이 기관들은 “현재 그들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을 달성하기 원하며... (또) 그 분야의 자원의 최적 이용을 위하여 서로 계약하길 원하는 지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제안들은 대략 12개 분야에서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의 평가(Edmonds, 1986; CPI, 1986)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자발적 기관들은 가장 열성적 반응을, 학술 기관들은 가장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조직, 성격, 및 재정의 문제들이 예견되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그러나, 사례 연구로서 또 다른 경우에서의 계획의 생산을 위한 발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9개 분야의 계획의 생산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정당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관심이 있었다.

도서관과 정보 계획이라는 아이디어는 일부 선진국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은 고위 관리층에서 승인되고 지지되며, 새로운 자금원이 없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계획은 규모에 있어서 또 우선 순위의 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이어야 하며, IT의 발전과 지역 기관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세번째 문제는 두번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공부문 도서관들이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적부문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이다. 오늘날 대개의 서방 국가 정부들은 사영화, 사적 기관과의 계약, 및 합작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떤 정부들은 그것들을 국가 경제정책의 선전적 특징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도서관들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이던지 또는 모기관의 주도에 따른 부분으로 이던지, 어떤 발전 방향으로 착수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영국을 다시 예로 들면, 정부의 협의서(Office of Arts and Libraries, 1988)는 2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합작 사업, 및 서비스 공급의 외부 계약. 그 협의서는 공적 및 사적 부문의 역할과 합작사업의 범위에 관한

협의회의 보고서(LISC, 1987)를 뒤따라 나왔다. 협의회의 조사는, “성격과 환경이 적절히 혼합된다면, 공적 및 사적부문의 상호작용은 양 쪽에 모두 유익할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밝혔다. 사적부문을 공적부문에 정보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고, 반대로 정보산업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얻는다. 양 부문간의 건설적 대화는 합작 사업을 위한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가맹권(Franchise) 운영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규정, 품질 책임의 명확한 할당,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모든 참가자의 신뢰성있는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보장과 같은, 합작 활동의 문제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영국정부가, 앞에서 말한바 대로 도서관과 정보 계획을 포함하여, 협력사업 진흥을 돕고 타당성 연구나 경제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발전 장려 계획을 발표했을 정도로 충분히 전망은 고무적이다.

네번째 문제는 도서관내의 IT와 관련된다. 지난 20년간 정책결정자들은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 - 수서, 편목, 대출관리, 재정 등 - 를 개별적이거나 협동적으로 촉진해왔다. 자동화는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시스템 분석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며, 비용을 줄이고, 또 부수적 용도(예로서, 편목 기록의 집중은 도서관 상호간 문헌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를 갖는 기록을 만들수 있다. 자동화는 다른 영역의 직원을 교체시켜 IT직원을 도서관으로 데려오고, 또 보다 앞선 IT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근거지를 제공한다. 일단 이러한 위치에 이르면, 도서관은 IT전반 - 특히 지역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온라인 서비스의 공급, 및 “워드 프로세싱/탁상출판/팩스전송”의 이용 - 에 관련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 2.2 일반적 및 전문적 접근법

대부분의 국가는 중요한 각각의 개발 영역별로 - 특히 산업, 재정, 에너지, 농업, 보건 및 환경관리 - 자체의 정보 서비스와 정책을 조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문 기관은 일반 기관보다 자기들의 주제 분야, 발전 목표, 및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 또는 혁신(방안)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전문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맞출수있고 요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고있다. 전문기관은 자기 도서관에, 관련된 문헌 또는 제공할수 있는 한 많은 관련문헌을 갖고있어야 한다. 전문 기관은 자체의 발표 체제가 필요하며 또 IT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생각할(독립적 사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들의 주제 분야는 크게 중복된다; 예로서, 환경관리 서비스는 산업 및 보건 서비스의 그것과 중복된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문헌의 구입과 편목을 중복시키며, 약간의 확장이나 수정으로 다른 개발 영역의 다른 집단에게 봉사할 수 있는데도, 특정 이용자 집단만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원을 중복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아마도 국립도서관과 정보센터와 같은, 종합정보서비스 활동과 지역 공공도서관 활동의 상당 부분을 중복시키고 있을 것이다.

재정자원이 허용한다면 그러한 중복은 너무 심각히 볼 필요가 없다. 중복의 예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중복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할 때, 특히 소국이나 빈국, 또는 공공비용 감축이 정부의 일반 정책일 때,

중복의 방지는 적어도 논의는 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기본 정책 또는 중복 영역의 서비스 기관간에 쌍무적 근거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예방은 도서관과 정보센터간의 협력을 뜻하며 세심한 기획을 요한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도서관상호간 문헌공급을 위해 만든 정기간행물 보유 기록은 이용도가 낮은 정간물들이 어느 정도까지 두곳 이상에 보유하고있는지의 범위를 보여준다. 아무리 적어도, 기관간의 질문의 조화는 협력적 틀 속에서 개발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 개발, 특히 IT의 도입은, 한 전문분야와 다른 분야간 또는 전문분야들 전체와 일반적 서비스 간에 고르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 그 과정을 평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이것이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아무도 이것이 쉬운 일이라거나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여러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최선의 자극은 재정적 誘因, 즉 국가정책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에 할당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2.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여기에서는 신문, 일반 도서와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전시물 등의 '대중 매체' (mass media)를 통한 모든 부류의 대중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된다. 이들 매체는 일반 정보를 오락과 혼합하며 또 공공도서관이 행하는 것과 같이 정보정책의 범위 내에 들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정부는 모든

직급의 '정보직 공무원' (information officers)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은 주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PR)이다. 그러나 매체 취급은 두가지 주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 취급과는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첫째는, 매체가 취급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soft' 하며 즉 정밀치 못하고 신뢰성이 적으며, 또 누구던지가 아니라 저널리스트가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의 PR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주는 것 만큼 많이 정책을 설명/해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어떤 PR의 경우는 솔직히 선전적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땅도 아닌 곳' 이라기 보다는 '두사람 모두의 땅'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제선적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체가 정보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 및 기타의 아이디어들의 대중화는 좀더 공식적 정보 서비스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한 청중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다. 대중화는 자기 주제분야에 박식하고 어려운 재료를 설득력있고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재능있는 작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를 가진 독자/시청자 대중은 정보 문제에 어떤 관심을 보여줄 것이므로, 대중화는 정보 이용자 교육의 필수적 부분이다. 출판업자, 고급 신문/잡지의 편집자, 및 라디오/TV의 연출자(producer)들은 대중화의 정보가치를 인식/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의 증폭은 서방국가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수요는 고급지들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크며 국제적 협력도, 정기적 구입을 위한 신문/잡지용 기사의 연합(syndicating) 또는 TV 프로그램의 판매/교환 등과 같이, 빈번하다. 그러나 공급에서의 갭(gap)이 때때로

드러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체에 제시될 수 있는 경로를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한다. 또한 '전자 멀티미디어 출판' (electronic multi-media publishing)이 발전함에 따라, 출판업자와 시각 매체간에 보다 더 밀접한 연결을 안출해내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발달은 정보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매체와 PR 공무원의 상당한 관련을 의미한다.

#### 2.4 정보 및 IT 정책

가장 중요한 경제선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정보 및 IT 정책과 관련해서이다. 경제적 선진국 모두는 IT정책에 높은 우선 순위를 주며 그 정책들을 두 가지 기준에서 짚는다:

- 1) 모든 직업계층에 IT의 적용을 촉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그것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
- 2) 국내의 IT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예상되는 수요중 최소한 어느 정도를 맞추도록 하고 또 수출시장도 마찬가지로 확보토록 장려한다.

이 두 가지 정책기준은 쉽게 교차될 수 있다. IT의 적용은, 만약 그 적용이 애국적 이유로 2류나 부적절한 국내 제품을 이용해야하거나, 국내 산업이 그 분야에서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IT의 한 종류만을 이용해야한다면, 최선으로 촉진되지 않는다. 그와 똑같이, 자국내의 시스템 디자이너에 의해 거의 지원받지 못한다면 국내산업은 빈약한 자극만을 받을 뿐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IT정책의 중요 요소가 된다.

IT정책은 흔히 산업정책의 부분집합

(subset)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보 - 내용, 실제로 정보시스템의 목적인 - 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출판/축적/전달/검색되는 수단과 오히려 관련 있다. 정보에 대한 정보정책의 접근(법)은 기계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지, 이용자가 원하거나 수용할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IT가 정보서비스에 의해 유익하게 이용될려면, 정보정책과 IT정책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대개 IT정책을 정보정책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높은 지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IT정책결정자들은 정보정책결정자들과의 관계를 빈약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자들의 관심은 IT정책 속에 잘 포함될 수 있다.

그 과정은 국제 기관의 활동에서 명백히 보여져 왔다. 1964년과 1974년 간에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IT와 정보 정책 각각에 관련된 두개의 집단을 분리 운영하였다. 1등이 2등을 그 자금과 함께 인계 받도록 운동을 벌였으며, 결국 성공하였다. 그 이후 OECD는 정보정책결정자들에게 큰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다. Unesco 역시 두 집단을 동시에 운영해왔으나, 유네스코의 명예로 그 둘을 합병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유네스코의 정보 프로그램은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EC(European Communities)의 위원회는 항상 정보정책을 IT의 응용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즉, 미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세계시장에서 이들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유럽의 IT산업을

세우기 위한 운동의 일부로서 간주했던 것이다. 그것의 자연적 접근법은 시스템 지향적이었다. 회원국들로 부터의 압력만이 순수한 서비스 지향을 도입해왔다.

IT정책결정자들이 정보정책에 대하여 계속 생색을 내야할 이유는 없다. 그들은 지식과 경험의 부족때문에 주로 그렇다. 이 깊이가 메워짐에 따라 그들은 자세를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국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정부의 ITAP(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Panel)보고서 (ITAP, 1983)가, 독립된 IT제조업자 집단이 어떻게 신속히 그 주제를 파악하고, 과거에 소홀했던 그것의 측면을 강조하며, 정보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법이 더 일반화 될 수 있었다면 경계선적 문제의 상당수는 사라졌을 것이다. 과거의 많은 측면들은 IT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정보와 도서관 정책을 함께 결합한지 수십년후 그들을 다시 분리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IT정책이 정보정책을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보직 동업자들이 ITAP보고서에 반발해온 방식때문에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 통신기관들이 분리된 정책 실제로 존재하려 하기 때문에, 특히 그 기관들이 사영화되어왔거나 되고있는 국가들에서, 정보와 IT정책에 관련된 당사자는 실제로 셋이다. 理想的 전략이라면 자료 전송망, 온라인 공급자, 및 온라인에 입력할 데이터베이스 등의 창조를 관리하는 정책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달성하기 어렵지만, 그것에 가까운 것이 프랑스에서 달성되었는데, 그것은 Transpac망, Télé-

systemes-Questel 온라인 공급자, Télétel /Minitel 비데오텍스 서비스, 및 Inter-ministerial Mission(MIDIST)과 그 후계자(DIST)가 지원하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등의 조화로운 창조로 달성되었다.

정보산업분야에서의 국제적 대기업들의 빠른 성장은 정보정책결정자들은 물론이고 IT정책 결정자들도 경쟁해야 할 대상이다. 이 기업들은 역동적 정책을 갖고 큰 힘을 행사한다. 그들이 어떻게 IT를 채택하는가는 개별 정부의 희망이나 노력과는 거의 관계없으며, 그들의 전진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규제는 법적인 것 뿐이다. 그들은 서비스 개발과 새 IT의 응용 양쪽에 강력히 영향을 주며 또 왜곡할 수 있다. 정부 내외의 국가정책결정자들은 서비스와 응용의 균형잡힌 발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정보와 IT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영역이다. 그들의 통제적 역할은, 중소기업들을 대신한 행동을 포함하는, 충전활동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 만큼 혁신에 많이 공헌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FDS(Finsbury Data Services)는 현재는 Reuters가 인수한 영국의 소기업인데, '로이터' 스스로는 시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우량의 금융뉴스 서비스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FDS는 초기 단계에 EEC의 '제안요청'(calls for proposals)중 하나에 속하는 자금의 결정적 지원을 받았다. 통제적 역할은 또한, 정보산업이 아직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IT의 응용에 관한 실험을 의미한다. 그러한 실험은 정보 또는 IT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양쪽 모두로 부터

받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시스템과 서비스측면이 동등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IT정책은 자료보호와 국제적 자료 유통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문제들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정보정책에는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정보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을 도울 수는 있다. 정보정책은, 서비스와 이용측면에 집중하므로서,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이용자가 취급하기에 비교적 쉬운 시스템)의 설계를 개선하고, 실험적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와 중개자로 부터 믿을만한 환류를 보장하므로서 IT정책을 도울 수 있다.

## 2.5 사무정보정책과의 연결

사무정보정책과의 연결이란 주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 대개는 "IT정책과의 연결"의 부분집합이지만, 별도의 취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 '사무정보시스템'(Office information systems)은 때로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로도 불리우는데, 서방 국가들의 대기업들에서 점증적으로 개발중이며, 중소기업과 중앙/지방 정부에도 서서히 확산중이다. 사무정보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문서 작성과 편집, 전자 우편과 메시지 전달, 칼렌터/일기/주소록 같은 '일상 업무 지원'(routinesupport) 시스템, 서류정리와 검색시스템, 및 '의사결정 지원'(decision support) 시스템 - 초기의 '경영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좀더 세련된 온라인 형 - 등이다. 워드프로세싱(word processing)과 검색 같은 기 사용중인 일부 기술들은 정보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친숙하다. 다른 것들, 특히 전자



우편과 메시지전달은, 서서히 친숙해지고 있다.

정보정책결정자에게 첫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문제는 “정보서비스가 사무시스템으로부터의 과급효과를 채택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로서, 대규모 대학 및 공공도서관들, 특히 분산된 봉사 지역을 가진 곳들은, 몇가지 내부적 목적을 위하여 사무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이용자들같은 “싫어도 들어야 하는 청중”(captive audiences)에게 봉사하는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정보를 이용자의 책상에 직접 전달하는 사무기법을 채택할 수 있다 (Wilson, 1985).

두가지 좀더 어려운 정책 질문이, 도서관과 정보센터가 사무시스템을 막 개발하려고 하는 뚝기관의 일부가 될 때, 제기된다. 첫째로, 직원이나 외부의 정보 전문가가 시스템 설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해야 하는가? 다른 어떤 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만약 그들이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며, 기술적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실패가 정보검색에서나 사용의 용이성에서의 약점에서 많이 생길 수 있다. 최고의 사무시스템은 이용자를 설계와 실험에 밀접히 관련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정보전문가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들의 요구는 흔히 정보전문가의 분명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정보전문가는 정보의 구조, 서지통정, 쉬운 접근방법, 및 사실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검색시스템의 취급방법을 알고있다. 도서관과 정보 직원 역시, 시스템이 자신들의 사무 요구를 만족시키려 한다면,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설계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무정보기능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누가 그것에 대한 핵심적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그것이 사무실내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기능을 포함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정보 자원 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라는, 논의가 점점중인, 개념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보가 조직의 효과적 작동에 필수적인 여러 측면의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 자원은 외부정보 - 말하자면, 과학 또는 금융정보같은 - 와, 비교가능한 종류의 내부정보, 및 사무시스템에서 취급되는 광범위한 형태의 내부정보로 구성된다. 일단 컴퓨터시스템이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도입되면, 분리된 구성부분들의 관리를 통합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은 자동적이 아니다: 그 이익은 시스템 설계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깊게 식별되어야 한다.

정보자원관리의 주된 책임은 핵심경영진, 컴퓨터 센터, 도서관/정보센터, 또는 다른 곳의 관련 부서를 함께 모은 새로운 센터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의 기존 센터들은, 만약 경영진이 내부와 외부의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그 기능이 이미 얼마나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가에 따라야 한다. 꼭 그렇지 않지만 대개, 정보센터는 기업의 R & D 직원들에게 봉사하는 부서로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디자이너, 생산관리자 또는 구매 사무원들과 같은 다른 집단의 직원들, 그리고 아마도 경영진 전체를 위하여 외부 정보를 획득할 것이다. 정보센터는 이미 내부 생산된 문헌을 어느 정도 취급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정보센터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자원관

리를 위한 초점이 될 수 있었다. 비록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보 요구, 어휘 통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기록체제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IT의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더불어 필요로 했을 것이지만 (Wilson, 1985).

이러한 정책문제들은 처음 보아서는 개별기관에만 관련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가지 주요 이유로 국가정책결정자들에게도 관련된다. 첫째, 정부와 국가적 산업협회는 사무시스템을 산업에 도입하는 것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활동은 IT정책의 일부가 되지만, 그것이 성공하려면, 정보정책측면에서의 입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사무시스템을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에 빨리 도입하려고 한다.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1982년에 정부부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지방 정부 및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와 같은 공공기관등의 20개 실험 사업장에서 예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예비사업은 전시적 사업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예비 사업은 人的 및 조직적 문제를 노출했지만(Wilson, 1987) 관련 직원들은 시스템을 잘 수용했다. 평가 후에 DTI는 예비 사업에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서비스의 관리자와 공급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KMG, 1986).

EEC차원에서는 2개의 현행 R & D 프로그램이 사무자동화 부분을 갖고있다. ESPRIT 프로그램은 IT제품의 장래의 개발과 제조에서 유럽국가들의 협력확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데, 미국과 일본 제품들과의 더욱 치열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다. 하나의 하위 프로그램이 사무시스템 전용인데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시스템 이론 및 人的요인, 고급 workstations,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고급 멀티미디어 축적 및 검색 시스템, 및 통합 사무시스템 설계와 평가(CEC, 1984). INSIS 프로그램은, 정부가 고급IT를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장려하고 또 유럽의 IT산업이 이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관련되며(특히 전자우편과 화상회의) 또 부분적으로는 EC위원회와 회원국간의 일상적 문헌전달 문제와 관련된다.

이들 국가적 및 EC프로그램들에는 정보정책에 대한 관심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지만, 어떻게 이 목적을 달성하느냐는 개별 사업팀에 달려있다. 사무시스템은 IT와 정보정책결정자간의 협력을 위한 중요 영역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한 발의는 후자로부터 나와야 할 것인데, 후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 3.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

앞에서는 초국가적 기관이 IT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수있는 한 방법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정보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어왔는지와 국가정책결정자를 위해 만

들어진 문제들을 기술할 것이다.

### 3.1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에 OECD는 거의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IPG(Information Policy Group)을 통하여 국가정보정책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켰다. OECD산하 DSA(Directorate of Scientific Affairs : 과학문제이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IPG는 처음에는 그 명칭에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을 넣었으나, IPG가 OECD가 관심을 갖는 다른 주제 분야에까지 송금을 확대하므로써 그 말을 뺐다. IPG의 주요 업적은 국가정보정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 것과, 회원국 정부들을 설득하여 정보정책을 취급/조정하기 위한 국가적 초점을 세운 것이었다. 최초의 컴퓨터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IPG는 그 서비스의 가능한 미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IPG는 다른 활동부문에서 OECD에 의해 이미 다듬어진 기술을 사용하므로써, 정부의 정책 시행과 문제에 대한 정부간의 대결을 또한 초래하였다. IPG는 1974년에 OECD의 IT지향적 그룹과 합병되기 전에 캐나다, 아일랜드, 스페인, 및 F.R.G.(독일연방공화국)의 검토를 완료했다.

'국가적 초점'이라는 아이디어가 UN기구로 확산되었다. Unesco에서는 그 개념이 OECD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좀더 전문적 기구에서는 원자력, 농업 등의 전문분야의 개발로 국한되었다. OECD는 그러나 그 개념을 매우 상세히 개발해서 선진국들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았는데, 선진국들은 아직도 그것을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UN기구들은, 실제로 그들이 당연히 해야했던 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간 조직들이 그다음으로 국제 정보시스템과 서비스의 창조에 주목하였다. 비록 IPG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종류의 관리적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곳은 이상하게도 OECD였는데, OECD는 보통은 관리적 활동을 피했었다. IRRD(International Road Research Documentation)는 회원국들의 전문기관이 제공한 초록을 입력하여 만들어졌다. 그 자료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각각 활동하는 3개 센터에 축적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 3.2 UN 기구들

UN기구들은 그 다음으로 원자력과 농업분야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 서비스 각각은 회원국들로부터의 분산화된 서지 입력, 집중화된 처리, 및 회원국들에 대한 서비스의 배급에 기초를 두었다. 그들의 후원자들이 세계의 정보 출력을 좀더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회원국, 특히 제 3세계의 시스템과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할 가능성을 강조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양질의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는 광범위한 주제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획득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했다. 서방 국가들은 뒤늦은 제안에 열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그 제안 대부분은 INIS와 AGRIS보다 잘 수행되지 않았다. UN가족은 결국, 대규모 서지 서비스에서, 식별된 요구에 부응하도록 설계된 소규모의 좀더 전문적 서비스로 이동했다. 이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세계전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세계의 지역들

을 위한 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품질이 다양하지만 그들의 목적 달성에 있어 대규모 시스템보다 더 유망하다.

### 3.3 EC (European Communities)

1960년대 후반부터 EC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유럽을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서 점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설계된, IT기반의 유럽서비스망을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1972년초 그 계획은 EEC내에서 확고히 설립되게 되었으며 공식위원회가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워졌다. EC위원회는 정보정책을 IT정책의 부분집합으로 간주했다. 위원회는 비컴퓨터화된 정보서비스에는 관심이 없었고, 가능한 EC의 기술을 사용하여 EC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EC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였다.

EEC의 지지자 아무도 과거에 낭비된 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지는 이러한 목적 또는 유사한 목적을 시비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에서 오히려 발생했다. 초기에는 회원국들은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일치된 전망(vision)이 없었다. 위원회는 비전을 갖고 있었으나,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이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3개의 목적을 가졌다:

- 1) 유럽 자료통신망
- 2) 제한된 수의 온라인 공급자(위원회는 'hosts' 라는 말을 썼는데, host - 컴퓨터 운영자를 의미)
- 3) EC내에서 만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들

첫번째 목적에는 Eurone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나중에, 두번째와 세번째에는 DIANE(direct-access network)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EC위원회가 위원회 대신으로 유능한 기관이 운영하는 사설망으로 Euronet을 설계하려하자 첫째 목적에 문제가 발생했다. 대개의 회원국들의 경우 국가통신기관들(EEC내에서 '略하여 PTTs라고 부르는)이 그런 망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결국 위원회를 설득하여 위원회가 대부분의 자금을 대지만, PTTs가 설계하고 운영하는 망을 선택하도록 했다. 거기에 대응해 PTTs는 위원회가 구상하는 정보서비스를 초과하는 교통량을 다루기에 충분한 용량의 망을 구축했다. 그들은 또한 EEC 외부 국가들에 망을 연결했으며, 나중에 원래는 중앙통제식의 Euronet을 국가들간의 쌍무적 연결로 구성되는 망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의 채택으로 위원회는, PTTs가 자신들의 협력 페이스(pace)에 따라 그렇게 시행하기 전까지 몇년동안, PTTs가 유럽망의 모양/크기/기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 망은 비록 몇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했던 만큼 잘 되지않고 있다. 온라인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연결에 어려움을 느끼며, 그 망의 국가 및 국제적 부문 모두 EUSIDIC의 최근 보고서에서 심한 비판을 초래했다(EUSIDIC, 1987a). 10중 3의 전화 통화가 연구기간중 실패했고, 모든 국가가 나쁜 결과였으나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심했다. 그러므로 위원회와 회원국들은 PTTs가 명백한 하자를 시정하고 수용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EUSIDIC(1987b)은 유럽의 1인당 자료 이동이 미국 통계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정보산업관점'에서 유럽통신에 대한 더 광범위하면서도 균등하게 비판적인 분석을 하였다. 특히 EUSIDIC은 가격정책을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또한 위원회의 검토에서도 분석되었던 것이다(Anon, 1987). 가격정책은 나라마다 크게 차이나며 요금에서 큰 차이로 나타난다. 어떤 국가는 국내 서비스는 싸게 제공하나 다른 유럽국가에의 연결은 높은 추가요금을 받는다. 다른 국가는 그 반대로 한다. 위원회는 최근 綠書(CEC, 1987a)를 발간했는데, 고급 통신기술의 소비를 미국과 일본이 이미 달성한 수준까지 높이기 위하여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통신산업을 재정리하도록 유럽의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비록 이것이 IT정책 문서이지만, 그것의 채택은 결국 유럽정보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원국들이 온라인공급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두 번째 목적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치열한 국내 경쟁은 처음부터 온라인 공급자 수를 적게 유지했다. 비록 온라인서비스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상 증가했지만, 얼마나 많은 공급자가 수지를 맞추는가는 공개적 의문이지만, 자료 부족으로 대답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및 재정적 자료는 별도로 하고, 온라인 공급은 고수익의 전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공급자 수는 아마 상업세력에 의해 계속 제한될 것이다.

EEC의 곤경은 사적 부문보다는 오히려 공적 부문에서 계획된, 너무 제한되고 독단적인 선택에 위원회가 목표를 두고있는 것 같다는 것이

다. 회원국이 그러한 접근법을 수용했다면 자국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정한 엄격하지만 공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 누구에게나 망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비교해서 아직은 작은 시장인 곳에 너무나 많은 숫자인, 약 40개 공급자들이 초기에 참가했다. 정부 보조금 때문에 허약한 업자라고해서 반드시 제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급자들, 특히 Datastar, ESA, Pergamon Orbit Infoline (현재 미국으로부터 널리 운용중인), 및 Télésystèmes-Questel등은 다른 곳보다 분명히 더 잘 하고 있다. 비록 Télésystèmes이 1987년까지 정부보조금으로 무료 봉사를 목표로 했지만, 그들중 누가 수지를 맞추는지는 의심스럽다. 자금이 좀더 풍부한 곳들 중 일부는 실제적 손실을 보고있음에 틀림없다. 독일의 생의학 - 농업분야 대 공급자인 DIMDI는 1981-85년 4년간 평균 2,280만 DM을 썼으나 평균수입은 단지 370만 DM-비용의 16% -에 불과했다. 1985년 1년간 수입은 여전히 15%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1986년에는 35%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독일 물리학/수학/에너지 센터의 1985년 통계는 30%(수입 1,130만 DM ; 지출 3,740만 DM)였으나 이 숫자도 증가중이다.

EC위원회의 세 번째 목적인 유럽의 협력적 데이터베이스 시리즈는 회원국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시했다. 세 개의 공동체중 하나인 Euratom은 1960년대에 협력적 서지시스템인 ENDS를 개발했으나, 그때까지 그것은 INIS가 대신 해왔던 서비스를 준비했을 뿐이며 위원회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금속, 농업, 생의학 및 환경 관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많은 주제분야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위원회는 ENDS로부터 얻은 경험을 이용하려고 했다. 금속분야에서는 서지시스템이 설계, 실험되었지만, 회원국간의 고르지 못한 입력으로 고통받았으며 점차 관심이 적어졌다. 결국 활동이 중지되고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나중에 EC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는, 쌍무적 시스템으로 합작할 것을 동의했다. 농업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는 AGRIS에 대한 EEC의 입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또한 실패로 끝나고, 요구가 식별된 더 전문적 서비스에 대해서 노력이 나중에 집중되었다. 그런 노력은 또한 생의학과 환경분야에서도 주요 관심이 되었는데, 예로서 현행 연구 사업의 목록이 있다(MEDREP과 ENREP). 이 사업들은 흔히 회원국 정부를 통하여 공급된 입력에 의존하였으나, 일부는 단일기관 또는 협력하는 둘 이상의 기관의 책임이었다.

다른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제안들도 허사로 끝났으며 당연한 질차에 따라 위원회는 '제안 요구' 접근법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했다. 이 접근법은 회원국의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었으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EC위원회는 그가 지지하는 정보서비스에서 하나의 국가보다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성격을 장려할 필요성을 점차 강조해왔다. 이런 성격은 입력 단계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또는 특히 유럽 시장을 위한 서비스의 설계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위원회와 회원국은, 그러나, 개별 기관간의 협력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원회가 강요한다면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SIGLE사업은 자발적 협력의 좋은 예이다. 그

회원 7명은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EAGLE (European Association of Grey Literature Exploitation)을 설립했다.

최근 수년간 위원회와 회원국은 6개 우선 분야에 특히 주목해 오고 있다:

- 특허 정보
- 생물공학 정보
- 재료 데이터
- 전자 출판과 이미지 자료
- 산업 및 연구 정보
- 지역적 차이의 축소(특히 정보선진국과 정보 저개발국 사이의).

목적은 영역간에 차이가 있으나 각 영역내에서는 전문 서비스와, 유럽 이용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요구에 중점을 둔다. 그 사업들은 '제안 요구'로 시작되었던 현실주의의 성장을 반영한다.

도서관 우선 분야는 나중에 그 6개에 추가되었다. 최초의 사업은 사실 발견 조사였는데, 도서관 업무 자동화에 관한 것을 포함했다. 이들 연구는 미래의 유럽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좋은 기초를 제공했으며, 그중 일부는 회원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우선 분야에 대한 추진력은, 유럽에 관한 모든 서지 자료를 보유하는 중앙 컴퓨터 스토어(store) 형태의 'European Library'를 요구하는, 1984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의결(Resolution)로 제공되었다. 입력은 참여 도서관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직원은 이용자가 필요한 문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위원회는 그 주제에 관한 의회의 관심을 환영했지만, 1984년 11월 워크샵(workshop) 및 도서관협회들과 국립도서관

들 간의 쌍무회담에서의 논의들은 중앙화된 망보다는 분산화된 망을 더욱 선호했다. 그 아이디어는 더 이상 채택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인 미래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

공동 정보시장의 아이디어는 위원회 활동의 특별 목표가 되었으며 1985년에 장관협의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CEC, 1985). 사업은 정보시장의 8개 부문에 처음으로 집중되었다:

- 사적 부문의 역할
- 법적 및 규제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정보 유통의 장애 제거
- 고급 정보서비스의 이용과 수요
- 국가 및 EC 정책의 수립
- 재정적 및 상업적 환경
- 발전된 정보 시장에 대한 저개발지역의 참여

이 모든 사업의 토대는, 원래는 Euronet/DIANE의 출범을 돕기 위해 설립된, 그리고 지금은 IMDG(Information Market Development Group)로서, 정보시장이 제공해야 할 지식과 용도를 촉진하는 작은 팀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1992년까지의 새 사업계획이 장관들의 승인을 받았다(CEC, 1987b). 그 목적은 정보시장을 확대 설립하고, 유럽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촉진/강화하며, 및 고급 정보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마지막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일련의 예비/전시 사업에 의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안되었다.

EEC활동은 회원국들의 충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회원국들이 EEC활동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또 어떻게

EEC정책과 국가 정책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점점 더 분명히 생각해야만 했다. 개별 회원국들은 EEC활동으로부터 자국의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 이익을 얻고 또한 자국의 국가 서비스가 유럽시장에서 잘 이루어지며 또 이용가능한 자금의 정당한 몫의 확보를 보장하기를 원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때때로 소규모 국가들은 좀더 큰 국가측에서 경제적 제국주의의 형태처럼 나타나는 것에 분개했으며, 저개발 영역의 국가들은 그들의 특수 문제를 위한 특수 지원책을 찾기 시작했다. 유럽시장, 차라리 아직은 미국공급자가 점령하지 않은 시장이라고나 할, 이곳은 원래 기대했던 것 만큼 빨리 성장하지는 못했다. 온라인공급자의 경우, 북미시장의 그것과 비교할 만한 규모의 경제를 아직은 허용치 않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이르는 유일한 지름길은 그 시장의 일부를 빼앗는 것인데, Pergamon-Infoline이 Orbit을 산 것처럼, 미국공급자를 사지 않는 한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 생산자들은, 비록 미국의 온라인 공급자들이 유럽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팔게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벌 수 있는 큰 수입에 대해 확신하기를 바란다.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유럽공동시장을 위하여 상업적 관심과 지원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탈에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게 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CAS On-line과 JICST가 STN International을 만들 때 이미 그것에 대응했어야 했다.

### 3.4 기타 유럽 지역들

광범위한 지역적 협력을 위한 2개의 다른 조

직이 유럽에 있다. 하나는 Nordinfo(Nordic Council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Libraries)로서 두 개의 전문위원회의 합병으로 1977년에 설립되었다. Nordinfo는 회원국들의 국가정책 초점을 결합시키며, 지역내의 정보 서비스 개발을 도울 수 있는 협력사업에 쓸 수 있는 자체 자금을 갖고 있다. 그 자금은 EEC에서 가용한 것의 10%이하이지만, 봉사대상인구가 비례적으로 적고 지원을 요하는 좋은 제안의 수가 적다. 지원된 사업중 일부는 소규모이고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세가지 장점은 특별 언급이 필요하다. 첫째, Scannet은, 원래는 Euronet에 상당하는 Scandinavia것의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EEC의 DIANE 활동에 상당한다. Scannet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320개에 달한 북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 제공
2. 그 데이터베이스들의 건설과 이용에 대한 충고
3. 온라인시스템의 조정
4. 북구의 관점에서 온라인시장 개발에 대한 주목을 집중시키려는 노력

다른 두 개의 사업은 북구 연속간행물 연합 목록과, 북구의 데이터베이스와 공급자에게 지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개발인데, 후자는 기존의 게이트웨이(gateway)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후원자들은 보고 있다. 그것은 EEC에서 집행되고 있는 인터페이스시스템에 대한 작업의 북구쪽 상대방(Nordic counterpart)이다.

또 다른 지역조직은 Comecon 국가들에 봉사하는 것인데, ICSTI(Inter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란 곳에 의해 운영된다. 1970년 이래 ICSTI는 Comecon지역내의 데이터베이스와 서방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국제적 시스템에 대한 회원국간의 협력을 촉진해왔다. 주요 협력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 국립 컴퓨터기반 정보센터들, 및 시스템 관리자와 조정자로서의 ICSTI이다. 최근 몇년간 모든 Comecon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고 모든 국가센터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망의 건설에 비중이 두어져왔다. 예비 단계는 1986년에 끝나게 되어 있었으며, 지금부터는 점점 더 상업적 운영쪽으로 망이 변해가고 있음에 틀림 없다. ICSTI는 1990년까지는 이용자가 과거 5-10년간 발간된 세계의 과학 기술정보의 80-90%에 대한 접근을 할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그 망은 Cuba나 외 몽고(Outer Mongolia)같은 동구 외부의 국가로 부터도 접근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 봉사하는 유사한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1999년 현재 바야흐로 세계는 서기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 (?)이라는 묘한 이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려는 세계사적 흐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시대 역행적인 사고 발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명확하고 잘 정비된 국가정보정책의 不在나 빈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정책은, 변화를 예상하고 그러한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고, 종래의 방법이 더 이상 적합치 않을 때는 폐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면 그것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은 정책결정 차원에서의 '정신적 活氣'와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데, 이 두가지 자질은 다른 국가정책을 위해서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요한 것은 급격한 변화때문에 국가정보정책의 기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서비스 개발로 인한 재정적 손실, IT(정보기술)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약탈적 입찰, 고위층의 인사이동, '정신적 활기'와 '기업가 정신'이란 人的 자질의 부족 등은 국가정책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희석시키고 또한 정책결

정조적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정이 필요한 정책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元氣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즉, 그들은 유희(遊休) 기간과 외관상 무의미한 정책기구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 활동을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문제,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공문제,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이용을 촉진하는 문제, 경제선적 문제와 다른 정책과의 해결 문제, 국가적 및 국제적 책임 결정의 문제, 필요한 법 규정의 제정 문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의 제공 문제, 공공기관 자원의 이용문제, 및 재정 확보의 문제 등이다. 국가간의 주요 차이는, 수준의 차이는 별도로 하더라도, 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다. 즉, 규제와 촉진에 대한 상대적 강조, 공식적 계획수립/연구/실험에 대한 태도, 노력에 대한 성실한 조정을 위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 등이다.

## 참 고 문 헌

- Anon(1987). How dear is your bit? Information Market, JuneAugust, 48 : 6-7.
- 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4). ESPRIT workplan for sub-programme 4 : office systems. Office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C47 , 20 February : 42-56.
- CEC (1985). Work programme for creating a common information market, final. Brussel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 (85) 658).
- CEC (1987a). Communication by the Commission towards a dynamic European economy.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Brussels : CEC. (COM(87) 290 final).
- CEC (1987b). Proposal for a policy and plan for priority a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ervices market. Brussels : CEC. (COM(87) 360 final).
- CPI (Capital Planning Information) (1986). Library and information plans in the national context. London : British Library. (Research Paper 5).
- Edmonds, Diana J. (1986). Current librar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15).
- EUSIDIC (Europ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1987a). EUSIDIC survey of public data networks. London : EUSIDIC.
- EUSIDIC (1987b). (and Bernard Cullen International). European telecommunications the information industry perspective. London : EUSIDIC.
- ITAP (Cabinet Office) (1983) : Information Technology Advisory Panel. Making a business of information : a survey of opportunities.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 KMG (1986). KMG Thomson McLintock. Profiting from office automation : office automation pilots. Vol. A : The way forward ; Vol. B : Final evaluation results. London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LIS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Council) (1986). The futur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Progress through planning and partnership. Report to Office of Arts and Libraries.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14).
- LISC (1987). Joint enterprise :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provis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16).
- Office of Arts and Libraries (1988). Financing our public library service : four subjects for debate. A consultation paper. London :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Cm324).
- Wilson, T. D. (1985). Office auto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 British Library. (Library and Information Research Report 31).
- Wilson, T. D. (1987). Report on a further study of current developments in office automation. London : British Library. (Research Paper 12).